

현장에 강한, 신뢰받는 해양경찰

# 2021년 주요업무계획



2021. 1.

## 해 양 경 찰 청

## 1. 주요 성과

◆ 『해양경찰법』 시행('20.2.21.) 이후, '현장에 강한, 신뢰받는 해양경찰'로 거듭나기 위해 경비·안전·치안·환경 등 현장 중심 직무 기반 마련

## 외국어선 퇴거·차단



## 1 굳건한 해양주권·권익 수호

- ▶ 불법 외국어선 진입 차단·퇴거 주력 및 최초 한·중 해경 합동순시
- ▶ 경계미획정 해역 전략적 경비활동 및 통합방위 협력 강화
- ▶ 해양경비기획단·해양정보상황센터 신설, MDA 구축 가속화

## 2 『해양안전 책임기관』으로 성장

- ▶ 본청 주도 해양 안전관리 → 해경서별 연안 안전관리로 방향 전환
  - \* 지자체 연안 안전시설물 책임 강화,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 등
- ▶ 구조대원 등급화(2급/1급/마스터급) 및 현장부서별 특화 구조훈련
- ▶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적 지원
  - \* 수상안전지원센터 운영,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규칙 제정, 교육지원 등

## 해상조난사고 인명피해



## 해양범죄 검거건수



## 3 중단 없는 수사 개혁으로 경·검 수사권 조정 뒷받침

- ▶ 해양전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수사개혁 추진
  - \* 33개 과제 중, 영장심사관제, 조사/사무공간 분리 등 26개 완료
- ▶ 해양과학수사 인프라 확충
  - \* <조직> 과학수사팀 신설, <장비> 모바일 포렌식 도입 등

## 4 『국가·공공·민간』 통합 체계를 통한 방제역량 제고

- ▶ 해경 중심 → "해경-유관기관-민간" 합동 방제로 패러다임 전환
- ▶ 해상운송 위험물 정보집 제작 및 해양자율방제대 확대\*
  - \* (구성) 110 → 237개소, (인원) 1,600 → 2,952명, (참여율) 7.7 → 8.7%

##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



## 예산·기금 편성액



## 5 국민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 시작

- ▶ 역대 최대 예산 편성(1조 5,929억 원) 및 현장 예산·인력\* 확충
  - \* <예산> 962억(전년 대비 304억 ↑), <인력> '20년 1,064명, '21년 493명
- ▶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현장부서 훈련체계 재편
  - \* (인사) 직무능력표준 도입, 직별 세분화 등, (훈련) 53종 → 37종

## □ [경비] 굳건한 해양주권·권익 수호

-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 우리해역 진입 원천 차단  
퇴거 및 어업질서 확립 공동 인식을 위해 최초 한·중 해경 합동순시  
\* (외국어선 퇴거·차단) <'18년> 3,160척 → <'19년> 7,804척 → <'20년> 24,330척
- 해양경비기획단·해양정보상황센터 신설, 유인장비(함정·항공기)와 무인장비(인공위성·무인기 등)를 융합한 「미래형 경비체계(MDA)」 구축 가속화

## □ [안전] 『해양안전 책임기관』으로 성장

- 지자체와 다양한 예방활동 협업기반 구축\*을 통해 그간 본청 주도의 해양 안전관리를 해경서별 연안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정책 주체 전환  
\* ❶지자체 연안 안전시설물 확충 책임 강화(정부업무평가 반영), ❷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(30개소), ❸지자체 해수욕장 관리요원을 위한 '표준행동매뉴얼' 제정 등
- 고위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구조대원 등급화(2급/1급/마스터급) 및 현장부서별 사고 환경에 맞는 특화된 구조훈련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 
\* (해양사고 사망자) 88명→47명, (평균 사고대응시간) 34.7분→33분
- 해수면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적 지원  
\* '수상안전 지원센터' 운영(수도권 지원), '내수면 안전관리 지원규칙' 제정, 교육지원 등

## □ [치안] 중단 없는 수사 개혁으로 경·검 수사권 조정 뒷받침

- 해양전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수사개혁(33개 중 26개 과제 완료) 추진과 함께 해양 부조리·해상 마약류·국제 범죄 등 강력 단속\*  
\* (부조리) 3,366→3,954건, (마약) 173→412건, (국제) 대마 밀반입 러마피아(20명) 검거 등
-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해양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 
\* <조직> 과학수사팀 신설, <인력> 전문자격 취득, <장비> 모바일 포렌식 도입 등

## □ [환경] 『국가·공공·민간』 통합 체계를 통한 방제역량 제고

- 그간 해경 중심에서 “해경－유관기관·단체－민간” 합동 대응으로 패러다임 전환, 효과적인 예방 활동과 방제 조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  
\* (오염사고건수) 296→254건, (파공봉쇄) 194→387개소, (유류이적) 44→54척
- 대형재난으로 직결되는 해상운송 위험물(193종)에 대한 정보집 제작 및 지역 주민 참여로 신속하게 초동 대응토록 해양자율방제대 확대\*  
\* (구성) 110→237개소, (인원) 1,600→2,952명, (초동조치 참여율) 7.7→8.7%
-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제물품(마스크, 방역복 등) 15,000세트 조기 지원 및 방제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(베트남) 선정 등 新 남방 정책 뒷받침

## □ [혁신] 국민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작

- 속도감 있는 조직 변화를 위해 『개혁 전담팀』 출범, 개선과제 발굴 및 예산·인력·법률 등 업무 인프라 확충으로 탄탄한 조직 기반 마련

- ✓ (예산) 개청 이래 최대 예산('21년 1조 5,929억 원, 전년대비 4.2% 증액) 편성  
\* '적지만 업무에 꼭 필요한' 현장 필수예산 최우선 확보(전년대비 304억 원 증가)
- ✓ (인력) 현장 근무여건 개선 및 중부청 안전총괄부장(경무관) 신설  
\* '20년 1,064명, '21년 493명을 파출소·상황실·구조대 등 현장부서 우선 배치(예정)
- ✓ (법률) 「해경 임용령·시행규칙」 제·개정 및 「재난관리 기본법」 공동소관

- 직무 전문성 확보를 통해 유능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사 제도 혁신\*과 함께 현장과 실전에 강한 교육훈련 체계 개편 추진  
\* 직무능력표준·역량평가·전문직위제(126) 도입, 직별체계 세분화(해상2/육상7) 등
- 코로나19 대비 선제적 방역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여건 조성 및 구성원들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
- 최초의 「해양경찰 과학기술 중·장기 발전전략('21~'25)」 수립 및 “과학기술 자문위원회” 출범으로, 미래 성장을 위한 초석 마련

## 2. 보완 요구사항

### □ 현장 임무에 필수적인 법률의 제·개정 및 소관확대 추진

- 해수부 등 타 부처 법률에 해경 직무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나, 권한이 없어 환경변화에 따른 적시개정 및 독자적 정책 추진 한계

#### 〈 '21년 개선방향 〉

- ✓ 직무수행 기반 강화를 위해 타 부처에 입법, 공동소관 필요성 선제적 제시 및 국민 요구, 안전 관점 등을 근거로 한 설득력 있는 공론화 추진
- \* (제정) 장비도입·관리법, 민간구조활성화법, 수상레저법<분법> 등 / (개정) 해양경비법, 연안사고예방법 등

### □ 변화된 임무 환경을 고려한 인력·조직 보강 시급

-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기술의 변화는 빠르나, 상대적으로 인력과 조직 구성은 변화의 속도에 맞게 즉각 대응하는데 어려움 상존
- 드론, 빅데이터 등 新 기술 전담 조직\*·전문 인력 확충과 분야별 역할 분석을 통해 임무 환경의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연결 필요
- \* 2년간 벤처형조직 3개를 신설했으나, 미래형 기술을 반영한 특화조직 추가 요구 ↑

#### 〈 '21년 개선방향 〉

- ✓ 소요정원, 유동정원 등을 활용한 미래기술 특화 조직·인력 확보 추진
- ✓ 분야별 역할분석을 통해 변화된 임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·트렌드 선도 필요

### □ 코로나19 추이 감안, 대외 협업·소통 활성화 필요

- '20년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최소화 등 영향으로 원활한 관계기관 협업·의견교환에 제한적 조건이었음
- 그간 운영되었던 부처 간 정기협의제도 미가동 또는 축소\* 개최
- \* ① 해경청-해수부 정책협의회('19년 반기 1회 → '20년 미개최) ② 정책자문위원회('19년 2회 → '20년 1회) ③ 국민소통위원회('19년 2회 → '20년 1회) 등

#### 〈 '21년 개선방향 〉

- ✓ 관계부처 간 쟁점화 되는 의견 조율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협의체 재가동 및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場 활성화 추진

## 1. [대외] '뉴 노멀(New Normal) 2.0' 도래 및 국정성과 완성 요구

\*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의미하는 뉴 노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표준

## □ Post-코로나19 대비,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

- 5G 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(언택트) 활성화 등 '뉴 노멀 2.0' 도래로, 신규 행정수요 출현 및 업무양상 변화 불가피

## &lt; 뉴 노멀 2.0 행정수요 및 업무양상 예시 &gt;

- ▶ (경비) 인공위성·드론 등 무인장비를 통한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도입
- ▶ (구조) IoT 센서 등 첨단기술 활용, 지능형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도입
- ▶ (수사) 비대면 사이버범죄, 방역물품 밀반입·출 등 新 해양범죄 대응
- ▶ (방제) 위험요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해양오염 위험도 평가

- 제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미래기술 발전으로, 외부 전문경력자 수요 급증과 함께 신종 범죄 및 다양한 안보 이슈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
- \* 미국 新 정부 출범도 국내 해양주권·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
## □ '21년 국정운영 방향 제시, 『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』

- 정부는 '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'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,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중점 추진방향\* 설정

## &lt; 선도국가 5대 중점 추진방향 &gt;

- ① 빠르고 강한 '경제회복' ② '한국판 뉴딜' 추진 ③ 과감한 '미래성장동력' 투자
- ④ '고용·사회안전망' 확충 ⑤ '국민의 안전한 삶, 튼튼한 국방, 평화를 향한 의지'

- '21년은 現 정부 집권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 축적된 정책성과 표출 및 '22.3월 대선 대비 국민안전 관련 공약 발굴 수요 집중 예상
- \* '외청 재출범'(17년) 및 '해경법 시행'(20년) 이후, 국정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시적 성과 창출 및 해양안전 숙원사업 발굴·제시 필요

## 2. (대내) 조직 규모에 걸맞은 정책 성과 창출 적기

### □ '20년 구축한 직무 기반 연계, '21년 『현장에 강한 조직』 완성

- '21년은 해경법 시행과 내부출신 청장 취임 2년차로, '20년 구축한 직무 토대에서 연속성 있는 정책추진과 강력한 현장形 조직으로 도약할 시기
- '21년 확보한 예산·기금(1조 5,944억 원)과 소요정원(608명) 등 국민적 성원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성과로 조속하게 치환 필요

### □ 해양경찰법 계기, 직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수요 지속 파생

- 해양경찰법 시행으로, 해경 직무의 전문성·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법령 제정수요 발생 및 능동적인 입법환경 조성

#### < 주요 제정 추진 법률안 >

- ① 「해경장비 도입 및 관리법」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 및 체계적 장비 관리
- ② 「민간해양구조 활성화 법률」 교육훈련·복지 등 민간구조자원 활성화 지원
- ③ 「수상레저기구 등록·검사 법률」 구체적인 레저기구 안전기준 규정·관리 등

- 해사안전법 등 타 부처 소관법률에 규정된 우리청 업무 관련 내용 분리, 독립법률 제정(또는 공동소관) 추진으로 책임과 권한 명확화 필요

\* 현재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12개(단독 6개, 공동 6개)

### □ 검·경 수사권 조정 發, 해양 수사·정보 역량 재구축 기회

-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양수사 능력과 과거 불합리한 관행과의 절연 등 인권감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결 필수
- 수사권 독립 원년을 맞아 전문 역량 확보와 함께 중단 없는 개혁으로, “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” 해양특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시기
- 창설 이래 첫 分局이라는 조직 변화 속에 수사와 정보 기능의 조기 안정화 및 내부 협업·공조 활성화로, 강력한 시너지 창출 필요



## 1. 정책추진 전략

## □ 양적 성장(예산, 인력)에서 내실화(전문화, 법·제도 강화)로 목표 전환

- 예산과 인력의 대폭 증액·증원을 통한 조직규모 확장에서 적재적소 업무 인프라 강화 및 전문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으로 정책목표\* 전환

\*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고도화를 통해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, '적지만 업무에 꼭 필요한' 수요에 맞춤형 대응하는 것으로 무게중심 설정

- 기능별 업무 최우선순위를 「입법 활동」으로 설정, 임무 근거 법률 제정·분법·공동소관 등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집중 투자

## □ 단기/ 중·장기 계획 연계 및 소속기관 자율성·실행력 강화

- 「'21년 주요업무계획」을 중심으로, 「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(5년 단위)」, 「미래발전전략(비전 2030)」과 연동, 단기 및 중·장기 플랜의 시너지 유도\*

\* 향후 ①신규 업무분야 개척은 '주요업무계획'(미래과제)에서 총괄, ②중·장기 신기술·장비 개발 및 R&D는 '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'에서 관리, 중복성 해소

- 본청에서 수립한 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적 집행으로 완성되는 유기적 업무연계를 통해 본청-소속기관 간 정책일체감 강화

\* 성과평가·특별승진(급) 위임 등 지방청 역할 강화를 통해 해역 특성에 맞는 세부 정책을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

## &lt; '21년 예산 편성 주안점 &gt;

## □ 현장 중심의 구조·안전 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

- ▶ 高위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구조 안전장비 보강 및 신형 연안구조정(13척) 도입
- ▶ 동해권(강원·경북) VTS 신설로 전국 연안해역 선박교통안전망 완성
- ▶ 현장 중심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함정·항공기 정비비 현실화

## □ 미래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장비·기술 R&amp;D 강화

- ▶ 무인헬기(드론), 군집수중수색로봇 등 임무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
- ▶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한 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 등 신규 R&D 수요 지속 발굴
- ▶ 공공복합 통신위성,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미래업무환경 대응·준비 추진



## 2. 성과관리 전략

### □ 「정부업무평가」와 「자체평가·내부성과평가」 연계 강화

- 평가 분야별 주요 항목·지표별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의 정책 집행이 조직전체의 성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성과관리·평가 체계 보완
  - \* '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·취약분야 개선,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우리청 정책 목표를 설정

### □ 성과관리·평가의 시스템화 및 성과평가체계 지속 보완

- 통합성과관리시스템\*을 통해 성과목표 및 실적 실시간 모니터링, 시계열 분석, 평가 결과 산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관리·평가
  - \* 성과평가 대상, 항목, 비중 등 매년 개선되는 성과평가체계를 시스템 유지·보수 시 반영하여 안정적인 평가제도 운영
- 경찰서 평가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여,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여건 마련으로 지방청 역량 강화 추진
  - \* 단계별 권한 위임을 통해 부담 최소화 및 과정 상 문제점 개선('21년 부분 위임<지표·평가 분야> → '22년 전부 위임<지표·배점·평가 분야>)

### □ 국민 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한 만족도 조사 분야·대상 확대

- 일반국민 대상 정책 및 체감안전도 자체 조사 시스템 구축, 만족도 조사대상을 접촉고객에서 연안(도서)지역민까지 확대
- 접촉고객(서비스 만족도) 및 일반국민(정책·체감안전도) 만족도 측정 시스템 도입, '국민만족도센터(가칭)' 구축으로 정책품질 제고

#### < '21년 성과관리체계 주요내용 >

- 1 **(기관평가 ▶ 성과지표+만족도)** 주요정책과제 등을 반영한 대표적인 업무를 지표화해 성과를 측정하고 분야별 만족도조사를 통해 해양치안서비스 향상
  - ▶ 총 30개 <3대 핵심 분야(Ⅰ.해양안전관리 Ⅱ.법질서유지 Ⅲ.현장지원관리) 23개, 특성화 분야 7개>
- 2 **(부서평가 ▶ MBO 과제)** 지휘관과 소통합의 절차(워크숍)를 거쳐 성과지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과제·목표관리 추진
  - ▶ 과제개수 축소(3개 → 1개)로 타 평가항목과 중복 피하고, 양식 간소화하여 목표중심 성과관리

## IV

## 주요 정책과제

## 비 전

## 현장에 강한, 신뢰받는 해양경찰

5대 분야	주요 정책과제 (24개)	소관 기능
[1] 경 비	1.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해양권익 확대	경 비
	2. 상황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향상	상 황
	3. 한국형 뉴딜 연계, 체계적 장비 도입·관리	장비기술
	4.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안정적 위성정보통신망 확보	정보통신
[2] 안 전	5.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	해양안전
	6. 현장形 재난 대비·대응 역량 강화	수색구조
	7. 안전한 수상레저 인프라 조성	수상레저
	8. 현장에 최적화된 해상교통관제 체계 구축	교통관제
[3] 치 안	9. 해양 특화 전문수사체계 고도화	수 사
	10.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사활동 전개	형 사
	11. 해양에 특화된 정보·보안 역할 재정립	정 보
	12. 글로벌 외사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	외 사
	13. 대외협력 활성화로 국제법률·정보 역량 고도화	국제협력
[4] 환 경	14. 현장 중심 방제 인프라 구축	방제기획
	15. 민·관 공공 통합방제체제 고도화	기동방제
	16.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예방활동 추진	오염예방
[5] 혁 신	17. 체계적 정책관리 및 新 조직성장 전략 디자인	기획재정
	18.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운영 기반 강화	혁신행정법무
	19.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관리	인 사
	20. 지속적인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	교육훈련
	21. 스마트化를 통한 조직 미래발전 견인	스마트추진단
	22. 국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전략적 홍보	대변인
	23. 예방 기능 강화로 청렴 우수기관 도약	감 사
	24.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근무환경 조성	운영지원

## 1 목적형 해양경비 체계 구축

### ① 「해양경비법」 개정을 통한 미래 해양경비 기반 마련

- 「해양경비법」 개정을 통해 해양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, 정보 분석·융합역량 확보를 통해 선제적·전략적 해양경비 체계 구축 추진

#### 〈 해양경비법 개정(안) 주요 내용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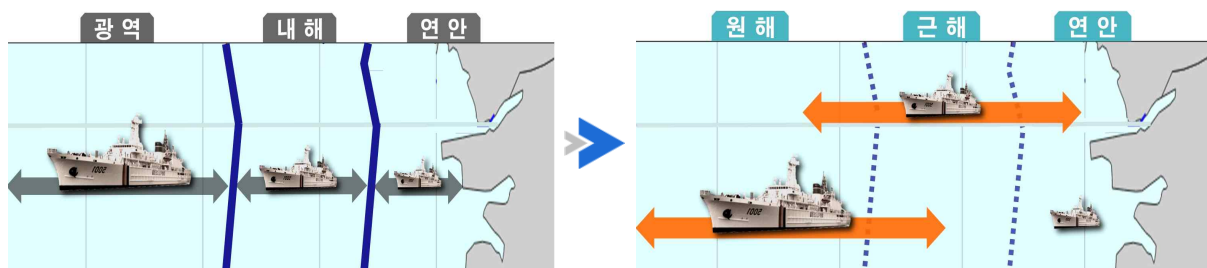
- ① '해양정보'의 정의 신설
- ②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 부여 및 해양정보시스템 구축
- ③ 수집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·활용을 위한 '해양정보상황센터' 운영
- ④ 향후 '해양경비기술원'의 설립 근거, 운영방안, 세부사업의 종류 등

### ② 해양정보인식체계(MDA) 도입 연계, 목적형 경비로 단계적 전환

- 기존 순찰형에서 해양상황을 실시간 감지·예측하는 광역해양감시망(위성·무인기 등) 활용, 선제적 세력배치 등 목적형 경비체계로 전환
- 해양경비정보지(예측정보)와 위성영상 분석정보(현시정보)를 융합한 치안수요 분석으로, 경비세력 탄력적 배치 등 실제 경비활동 연계

### ③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무인감시장비 도입 및 임무 중심 경비체계 구축

- 무인헬기(드론) 도입을 통해 해양공간(해상+공역) 관리 기반 구축
- 연안·근해·광역 등 경비구역 중심에서 치안수요·기상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연동\*시킨 '임무(함정) 중심 해양경비'로 전환 추진



#### ④ 함정보험·정비 Day 도입 등을 통한 임무역량 제고

- 정비 DAY·근무저축제 도입, 현행 집중근무제 등 근무체계 보완·개선으로 함정의 최상컨디션 확보 등 안정적 경비역량 유지
- 의경 폐지('23.7월) 대비 특수직무·정박근무·부두관리 등 함정운영 전반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(담당부서 협조) 주력

### ②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조업질서 확립

#### ① 한·중 해경 공동순시 등 외교적 협력 강화

- 한·중 해경 공동순시·합동훈련, 불법 조업어선 중국 측에 직접인계를 통한 이중처벌 및 이동정보 공유 등 한·중 해경 공조체계 강화

#### ② 해역별 특화된 대응전략 수립 및 고도화

- 해역별 특화된 외국어선 대응전략 추진 및 어망 와이어 절단기, 등선방해 제거장비(방현대) 등 신형장비 보강으로 단속효과 극대화

### ③ 해양위기 관리체계 고도화

#### ① 개정 「해양경비법」 근거,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(5개년) 수립

- 「목적형 해양대테러 체계」 구축 정책 연구용역 추진, 국내외 테러 정세 및 특공대 임무여건을 고려한 1차 해양대테러 기본계획(5년) 수립

##### 〈 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('21년 상반기) 〉

- ▶ (연구목적) 해양 대테러 패러다임 전환(인력→장비)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
- ▶ (주요내용) ①국외 테러정세 및 임무환경 변화 전망, ②해양경찰 특공대 역할재정립, ③4차산업기술 기반 해양대테러 장비 확보 등

#### ② 해양 고위험 특수상황(잠수구조) 등 부가적 임무수행 역량 강화

- 대테러 기본임무 外, 해양 고위험 특수상황\* 및 구조 등 중요상황 지원임무 수행을 위해 전술·장비개발·교육훈련 등 전문역량 제고

\* 동·서해NLL(특정해역), 불법외국어선단속, 특수범죄(밀입국), 구조인프라 지원 등

- 화력보강(5.57mm 소총), 침단장비(야간투시경,재밍건), 복제개선(멀티캠 위장복) 등 도입, 다양한 해양위기상황 대응력 강화

## 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개선

### ① 신고접수 시 위치정보조회 절차 정립을 위한 행정규칙 제정

- 중요 상황정보인 위치정보(GPS, 기지국 등)의 신속한 확보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조회 요건·절차정립 등을 위한 행정규칙 제정

### ② 선제적·목적형 상황관리체계 확립

- 위성영상분석, E-Nav시스템 연계, 해안경계 레이더\* 정보 등을 활용한 해양감시범위 확대로 안전관리 및 신속한 상황관리 강화
- \* 해군 및 경찰청 구축 중인 울릉도·독도 R/S 활용('21년 10월 완공 예정)

### ③ 상황시스템 기능개선·노후교체 및 교육용 시스템 구축

- 상황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·보강 및 업무 환경 개선\* 지속 추진
- \* '21년 22억 확보 完(5개 관서), 실시간 지도GIS 연계사업 기재부 등 대응
- 테스트용 서버 이용, 실제 서버와 구분된 교육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
- \* 교육원·지방청(지방교육센터)에 교육장소 및 프로그램 설치 등 협의

### ④ 소속기관 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

- 경찰서 상황실 4교대 근무 단계적 추진\*, 교대방법 개선(변형 6주기) 및 행정지원 요원(일근) 배치로 업무효율성 향상
- \* 3개 경찰서 4교대 우선 시행 및 추가 정원확보, 17개 경찰서 교대방법 개선

### ⑤ 상황분석 결과 체계적 관리 및 위험성 평가 활성화

- 상황분석 결과는 시스템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쏘 부서와 공유하고, 미비점 보완 및 상황처리 시 이행여부 점검 등 환류기능 강화
- 상황대응 시 인적오류 최소화 및 최적의 대응을 위한 위험성 평가 활성화

## ② 우수 상황근무자 인력풀 구성 및 교육·훈련 내실화

### ① 소속기관 상황실 평가체계 도입 및 상황요원 인력풀 구성

- 훈련·직무능력평가·상황분석·우수사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종합 평가체계 도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로 정책 수용도 제고
- 상황실 근무경력, 직무능력평가 결과, 교육 이수여부 등을 바탕으로 인력풀을 구성, 지속 관리하여 인사발령 시 반영 및 우수인력 확보

### ② 상황실-현장부서를 연계한 상황대응훈련 개선

- 함정·파출소·구조대 등 현장세력과 유기적인 보고·전파체계 정착을 위한 상황실~현장세력 간 상황처리(접수·보고·전파) 훈련 연계강화
  - 함정 해상종합훈련 및 파출소 자체 훈련평가 시 상황대응분야를 반영하여 현장부서의 신속한 상황전파체계 구축\* 및 훈련 수용도 제고
- \* 교육훈련팀(훈련단), 해양안전과(교육훈련지원팀)와 훈련방법 및 평가방안 협의

### ③ 상황분야 실습교육 도입 및 전문교육 확대

- 신입·전문과정 대상 교육용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습교육\*을 신설하여 이론-실습-사례가 연계된 교육으로 교육효과 증대
- \* 과거 항적조회, 선박정보 조회, 상황보고서 작성요령, 현장 상황시스템 사용법 등
- 교육원·지방교육센터 상황분야 교육 시 현장부서 참여확대\*
- \* 현장부서(함정·파출소·VTS 등) 상황처리 역량강화과정(2회 60명) 개설 예정

## ① 현장중심 장비도입 기반 구축으로 임무수행 역량 강화

### ① 변화된 환경 · 임무 특성 고려한 장비도입 · 관리 법제화 마련

- 해양경찰 장비 규모 ·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비 도입·운영을 위해 「장비 도입·관리 법률」 제정(~'21. 4월)
- 법률(案) 제정 · 공포 前, 전문기관의 하위법령 선행연구 법제화
  - \* 계획수립('21.2월) → 하위법령 마련(3~8월) → 규제심사 등(9월~'22.3월) → 공포('22.4월)

### ② 현장임무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도입 기반 구축 강화

- 신규장비 증강 및 노후장비 적기 교체로 현장임무수행능력 강화
- 뉴딜 연계, 친환경 함정 도입, 중부권 헬기(대형 1, 중형 1) 증강 및 노후장비 대체(300톤, 단정, 카모프 등) 추진으로 장비도입기반 마련

## ② 현장 임무수행을 위한 함정정비 · 보급 지원체계 고도화

### ① 함정 안전진단 세분화, 정비팀 운영, 원격 정비체계 등 정비지원 강화

- 안전진단 주기, 검사항목 등을 세분화 하여 선령에 적합한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세부기준 마련, 신뢰성 제고
- 既 구축된 원격응급의료시스템(EMS) 활용, 정비창↔중형함정(42척) 원격 정비지원체계 확대 설치(현재 35척 정비지원시스템 설치 완료)

### ② 주요물품 지원, 경량화창고 관리 등 보급정책 연속성 확보

- 임무수행 필수물품(구조·안전장비, 로프) 적시 지원 및 기관부속 자동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(용역 발주) 등 보급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
- 독자적인 해양경찰 시인성 제고를 위한 중·소형함정 현측 색상 및 함정 안전헬멧(함정 5척 시범착용) 개선 등으로 현장 만족도 향상



### ③ 현장에 적합한 활동형 기동복 도입 및 해양경찰 표준체형표 개발

- 일상복처럼 착용 중인 기동복을 작전·대민지원 등에 적합한 ‘활동형 기동복’으로 개선, 착용감 등을 적용한 복제별 표준체형표 개발

### ④ 서부정비창의 총사업비 증액 및 일괄발주 추진으로 적기 완공 도모

- 적정 수리능력 및 필수시설 확보\*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및 스마트 기술 적용,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품질 확보 가능한 일괄발주 추진

\* 상가시설, 의장안벽, 본관 및 수리공장, 동력실, 보급창고, 폐수처리시설 등

## ③ 항공 분야 인프라 증강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

### ① 숙련 전문인력 확보 여건 마련 및 항공시설 표준모델 개발

- 항공단장, 조종·정비사 등 처우 개선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
  - 조종·정비사 본연의 업무 집중을 위해 청사·격납고·관용차 등 시설 관리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 인건비(10명 /3억원) 확보 추진
  - '21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3건\* 동시 추진 관련 최신 정비실, 필수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항공시설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
- \* ①인천 회전익정비고, ②강릉 회전익항공대, ③무안 고정익정비고 신축

### ② 중부청 태안 해역 회전익항공대 및 항공기 부품관리 전담부서 신설

- 조난사고, 밀입국·불법어선 등 치안수요가 많은 중부청 태안 해역 (인천→태안보령 40~50분 소요) 신속 출동을 위해 회전익항공대 신설\*
- \* '21년은 항공대 신설 기반 마련을 위한 격납·대기공간, 예산 확보에 주력
- 자체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정비대 충원 및 전국 항공대에 분산관리 중인 항공기 부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항공보급지원대 신설

## ① 현장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·전문성 강화

### ① 4차 산업기술 해양경비·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위성통신망 확보

- 경비함정 사물인터넷(IoT), 드론, 빅데이터, 증강현실(AR)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한 시스템 증가 대비 위성통신망 확보
- 육·해·공 입체적인 경비체계 강화를 위해 위성기술 개발 및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 확보 추진

### ② 신형 레이더(SSPA)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·전문성 강화

- 신형 레이더 교체 사업 시 해양경찰 임무 맞춤형 장비 도입과 체계적 사업 관리(외자구매)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체 기준 수립
- 경비함정 운용자의 신형 레이더 이해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실시 및 교육원에 실습용 레이더 설치 추진

## ② 해양정보 활용 극대화로 현장 임무 수행 능력 강화

### ① 「데이터 통합포털 구축」으로 상황처리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

- 「데이터 통합포털」에서 One-Stop 검색하여 다양한 현장맞춤형 데이터(V-PASS·통합상황관리 등) 신속 제공으로 신속한 상황처리
- 다양한 복합주제(안전·단속·범죄·레저 등)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3차원 지도 표출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기대응력 강화
- 통합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기술(음성인식·인공지능 등)과 결합하여 융·복합 지능형 서비스\* 기반 마련

\* 빅데이터맵 구축('21) ⇨ 음성 챗봇(업무규정·상황대응 매뉴얼 검색, ~'22년)

### ② 업무인터넷망 증속(20배↑)으로 신속한 현장 상황 정보공유

- 현장과 지휘부 간 실시간 초고속 정보공유를 위한 대역폭(속도) 확대
- 신기술을 적용을 위한 노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교체

## ① 연안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 안전체감도 제고

### ① 연안해역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 및 신기술 적용 안전시설물 개발

- ‘추락위험이 높은 갯바위, 테트라포드, 방파제 경사면 등에서 낚시하는 사람’에 대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법제화
- 차량추락장소, 갯벌·갯바위 등에 특화된 시각적 인지효과가 높은 ‘위험표지·알림판 개발’ 및 위험구역별 ‘안전시설물 표준관리지침’ 제정

### ② 민·관 협업 촘촘한 연안안전망 구축

- ’21년 연안안전지킴이 정식운영(全 해경서, 총 80명, 5~10월)을 위해 운영규정 제정 및 향후 확대를 위한 지자체 매칭사업 추진
- 연안해역 위험예보 시 ‘긴급재난문자’ 발송(행안부) 및 차량이 해상추락 다발지역 접근 시 ‘추락주의 알림 서비스(화면음성)’ 개시(T-map아이나비 등)

### ③ 초등교과서 내 ‘연안안전’ 내용 수록 및 수준별 교육 콘텐츠 제작

- 초등학생 국정 교과서(안전한 생활/1~2학년용)에 ‘연안안전’ 내용 수록 추진, 자연스럽게 연안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유도
  - \* (1학년) 올바른 구명조끼 입기 방법 / (2학년) 갯벌, 테트라포드 안전수칙
-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초·중·고 연안안전교육 의무화 대비 유아, 초·중·고등학생 수준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

### ④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·캠페인 강화

- 보다 체계적·전문적 연안안전교육을 위해 현행 해양경찰관 직접 교육에서 민간위탁교육으로 전환 추진(예산, 강사 등 확보)
- 사회공헌 및 모바일 특화 기업(카카오, 쿠팡, 배달의 민족 등)과 협업 모델 개발, 정부부처 인프라 공유 등 국민 친화적 공익홍보 추진

## ② 현장에 강한 파출소 구조안전 인프라 구축

### ① 신형 연안구조정 및 파출소 교육·훈련 개선

- 자동화 장비\*를 탑재하고 저수심 운용성을 강화한 개선 모델 배치 ('21년 3척, '22년 10척) 및 연안구조정 미배치 파출소(20) 추가 도입
- 상황별(충돌·전복·인명구조) 불시훈련 강화와 함께 인명구조자격증 취득·갱신 및 단계별 구조 전문화 교육과정 운영

### ② 파·출장소 운영 내실화 및 대행신고소 정비

- 순찰형 출장소 통합을 통해 실제 상황대응이 가능토록 출장소 인력 확대(日 2~3명 근무) 및 지역수요 감안, 구조거점 파출소별 인력 재조정
- 연차별 감축계획(~'23년)에 따라 전국 856개 대행신고소를 매년 약 30%씩 정비하여 정책완료 시 약 95%(817개소) 정비토록 추진

### ③ V-Pass 및 어선 출입항 시스템 개선

- 안정적 V-Pas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추진 및 V-Pass를 통한 e-Nav 출입항내역을 어선 출입항시스템과 직접 연계
- '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' 기능 개선을 통해 편리한 출입항 이력관리 도모

## ③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

### ① 유도선 지원사업 다각화 및 운항관리 강화

- 선령 초과 노후선박 대체건조 이차보전사업 활성화 및 영세업체 지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유관기관(문체부 등) 사업 참여 추진
- 승객신분 확인과 출항신고를 위한 「유도선 정보시스템」 운영(행안부 협업)

### ②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현장안전 중심 사고예방 활동 전개

- '해양 유·도선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'(해경청) 및 '실무매뉴얼'(보건복지부·경찰청 등 9개 기관) 점검을 위해 지역별 도상(실제)훈련 실시

### ③ 낚시어선 승선신고 시스템화 및 안전위반행위 단속 강화

- 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, 신고자 편의 제고 및 정확한 낚시어선 승선자 확인을 위해 낚시海 시스템(해수부, '20.10월 구축) 활성화 추진

## ① 수색구조 법령 제 · 개정 및 민관 협력체계 고도화

### ① 「민간해양구조 활성화법 제정(가칭)」 및 구조대 운영 내실화

- 「민간해양구조 활성화 법률」을 제정, 「수상구조법」의 민간해양구조 분야 분리 및 민간구조 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지원 도모
- 드론 · 서핑 ·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민간영역\*으로 확대, 민간해양구조대의 수직(7천→1만명) · 수평(분야 확대)적 확장 도모

\* 지역리더를 영입, 민해대의 중추그룹으로 육성 및 민간단체(민해대+방제대)를 단일화 추진

### ② 체계적인 민간 해양구조 지원을 위한 수상구조법 개정

- 정책자문 위주의 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구조기술 자문 등 실질적 기술 지원을 위한 ‘수색구조기술위원회’로 개편(정책조정, 기술자문 분과구성)
- ‘수난구조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\*’를 필수 조례화하고, 합리적인 보상 체계(비용산정, 기준 등)마련 등 민간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

\* 쏜 연안 지자체(74개) 수난구조 참여자 대상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완료('20. 12월)

### ③ 민간 주도 예인산업 활성화

- 경비공백을 야기하는 국가 예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非긴급성 예인은 선주 · 운항자 책임 하에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예인 기준 정립
- 예인대상 선종, 해역별 예인수요 및 예인주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, 국민이 공감하는 「민간예인 산업 활성화 방안」 마련 및 연구용역 추진

## ② 현장에 강한 수색구조 역량 제고

### ①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 · 구급 전문성 강화

- 심해구조를 위한 표면공급잠수(SSDS) 운용인력 보강(중특단 66명) 및 구조대장 역량평가·쏜 대원 등급제 시행으로 구조대 정예화

- 현장부서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과정 지속 확대\* 및 일반 경찰관을 구조대원으로 양성하여 구조전문 인력풀 보강
- \* '23년까지 순환근무 여건 고려, 현장근무자 3천명 이수 목표('19~'20년, 1,198명)
- 구급역량 제고를 위한 구급업무(인력·장비·임무 등) 발전계획 수립 및 EMS 통신망 개선(LTE→LTE-M) 등 해양응급 시스템 운영 고도화

## ② 현장 구조세력 안전성 확보 및 훈련체계 선진화

- 해외기관(미·캐 코스트가드)의 '위험성 평가 제도\*'를 수색구조 분야 적용, 현장 안전 강화(중특단·구조대 우선 적용 후 파출소·항공대 확대)
- \*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험성 평가 및 조치표
- '21년 수난대비훈련은 인력·장비 집합형 훈련에서 탈피, 무인정·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토의식 훈련형태로 전개

## ③ 구조 대응체계 고도화 및 구조문화 저변 확대

### ① 구조본부 운영체계 개선

- 사회재난 중심의 구조본부를 사고대응 중심의 사회재난과 예방·대비 중심의 자연재난으로 이원화하고 관련 규정·매뉴얼 등 일괄 정비
- 해양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'개별선박'에서 '선사' 중심으로 전환,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해양사고 대비활동 전개

### ② 구조 문화 확산 및 학술·교육 프로그램 개발

- 어선원(외국인 포함) 등 해양종사자 대상, 긴급상황시 초동구조, 응급처치, 소화기 사용법 등 구조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영상·책자(다국어) 제작·배포
- 해양 학회 공동 MOU 체결 및 학술교류 정례화(반기 1회), 해·수산계 학교에 수색구조 커리큘럼 편성을 통해 수색구조 기술·교육 저변 확대
- 민간해양구조 지원예산 한계, 민간구조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민간해양구조대 후원계약 추진

## ① 수상레저 법령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

- ①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정 등 법·제도 정비
  - － 현재 면허·안전관리·사업·등록·검사 등이 총괄 규정되어 있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서 기구 등록 및 검사 내용을 분리하여 개별법 제정
- ②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규격 등 개선
  - － 수상레저기구 다양화·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, 편법사용 방지를 위한 등록번호판 규격\* 및 색상(개인·사업용 기구 색상 구분) 개선
  - \* 번호판 규격 : 6M미만 기구 기존(8\*29cm)과 동일 / 6M이상 기구 15\*70cm 확대
- ③ 모바일 기반의 차세대 수상레저종합포털 구축
  - － 모바일기기로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행정업무 전자화 추진
  - － 안전검사, 보험가입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, 단속 효율성 강화

## ②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정책 소통 강화

- ① 수상레저기구 위치표시 시스템 구축
  - － 레저기구 안전성 확보 및 사고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휴대폰 앱(바다내비/해수부) 활용 실시간 위치표시 및 해경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연계
- ② 서프보드, 카약 등 개인 레저활동자 안전관리 강화
  - － 서핑 안전수칙, 카약전복 복원방법 등 안전 영상·가이드 제작 및 서핑·카약협회, 수상레저 동호회 간담회 등 민·관 안전 협업강화
- ③ 수상레저 정책 국민 소통 강화
  - － 수상레저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·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「수상레저 컨퍼런스」 개최 및 「수상레저안전 국민포럼」 강화



## ① 현장 임무형 선박교통관제 조직 개선

### ①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주체적 기술개발 근거 마련

-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주체적 기술개발 근거마련 (시행령 제12조) 및 교육과정 반영 등 개정 추진
- VTS 시설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ITU\* 등 국제표준에 적합하고 최신 기술사양을 반영 고성능 관제장비 도입 기반 마련
- \* (ITU)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UN 산하의 전기통신업무 국제 관리·표준 기구

### ② 「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」 운영으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력 확보

- 선박교통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및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장에 필요한 4차 산업기술 접목 시스템 개발
- 인공지능을 VTS 시스템과 연동시켜 관제화면상 선박물표 中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판별·지원하는 관제시스템 마련

### ③ 연안(경찰관)-항만(일반직) 융화를 통한 관제역량 시너지 향상

- 일반직 전문성과 경찰관 상황대응능력을 융합, 관제역량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"연안(경찰관)-항만(일반직)" 합동근무체계\* 마련

## ② 미래교통환경 대비 시스템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

### ① 클라우드 VTS 개발로 관제기술 고도화

- 광역VTS 기반 마련 및 해양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VTS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

### ② 현장실무형 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

-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맞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공통 교육과정\* 도입

\* 정책 및 조직관리(5급/3일), 실무업무 심화과정(6급/1일), 공통직무 실무과정(7급/3일)

## ① 수사권 개혁 완성을 위한 책임수사 확립

### ① 수사심사관(경찰서) 도입을 통한 수사지휘 체계 강화

- 개정 「형사소송법」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가 제한되고, 수사부서장이 법률적용·해석, 증거관계 보강 등을 최종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담 과중
- 수사경험이 많은 수사관을 수사심사관으로 지정, 관서 내 사건 (외사·보안 수사 포함)에 대한 진행사항 지도·점검 및 수사지휘 보좌

### ② 본청·지방청의 사전·사후 통제절차를 통한 수사책임성 강화

-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수사 주체로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영장 사전심사 또는 종결사건에 대한 사후심의 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
- 인권침해가 큰 강제수사 前, 영장에 대한 적절성 등을 사전검토하고, 수사과오·부실수사 여부 등 수사과정에 대한 사후통제 강화

## ② 수사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한 등 위임

### ① 관서장의 인사권 위임을 통한 준 독립적 수사부서 운영

-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전보권·근무평정권을 수사부서장에게 위임\*함으로써, 수사행정의 독립성 및 수사부서장 책임인사 구현
- \* 개정규정 : 「경찰공무원법」, 「임용규정」(대령), 승진업무처리 지침 등
- 규정개정 전까지는 관서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전보권 부여

### ② 내부 청렴도 향상을 통한 수사부서 감사감찰 강화

- 수사인권보호 정책, 자체 비위조사·통보 등 수사청렴도를 강화하고, 準독립적 감사·감찰권은 국수본의 독립성 정도와 발맞춰 범위 검토

### ③ 수사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평가체계 및 교육과정 마련

#### ① 수사간부의 역량검증·지원을 통한 수사지휘 능력 강화

- 수사간부 능력을 객관적 평가·분석하는 「수사간부역량평가제」를 바탕으로 수사부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시행, 수사독립성·책임성 강화
- 기존 검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사간부 교육을 정례·세분화하고, 수사지휘관을 보좌할 수사심사관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추진

#### ② 체계적 수사교육을 통한 수사실무자의 전문 수사능력 향상

- 불송치 결정서 작성 등 개편된 사법절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교육\*을 실시하고, 직급별·경력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사품질 향상
- \* 변사, 이송접수, 피의자석방, 사법경찰관 결정 등 개편된 수사서식 및 KICS 사용법

### ④ 해양과학수사 운영 체계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

#### ① 첨단 기술 기반 「과학적 해양범죄 대응시스템」 구축

- 빅데이터·AI 활용 해양범죄환경 분석 → 최적의 과학수사 솔루션 도출

#### ② 해양특화 분야 법규 등 정비로 전문성 및 대내·외 공신력 확보

- 해양과학수사 특성화 분야 선도적 역할 정립을 위한 규칙\* 제·개정
- \* 「수중증거물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정(∵ 유관기관 제정 사례 全無), 기타 증거물 보관실 설치·운영 규정, 과학수사 기본규칙 개정 등
- 대형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 원활한 과학수사를 위한 규정\* 마련
- \* '과학수사 해양재난대응 가이드' 작성, K-DVI(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) 구축 병행

#### ③ 「과학수사 거점센터」 운영, 현장 초동과학수사 역량 강화 지속 추진

- 출동 장시간 소요 원거리 경찰서 대상 과학수사 전문 경찰관 지원
- 함정·파출소 등 과학수사 전담요원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

## ① 사건관리 강화를 통한 경찰 책임수사 실현

### ① 중요사건 처리지침 제정을 통한 현장의 체계적 수사 지도·지원

-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초기부터 수사본부 또는 수사팀(TF) 구성, 수사사항·절차 검토, 공보 등 체계적 관리
- 「해양경찰법」 개정에 따른 중요 사건의 대상범위, 처리 절차 등 정립
- 평가·환류를 통한 수사역량 제고, 유공자 포상 및 시정조치 개선

### ②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사사건 관리 강화

- 해상 절도 등 신고·발생사건의 부실수사 방지 및 인지 사건의 장기간 수사과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·감독 강화
- 소속기관별 주기적 자체점검, 지도감독을 통한 적법절차 준수

## 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형사활동

### ①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행위 및 해양분야 생계침해형 범죄 집중단속

-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강화 및 장애인·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집중 단속 실시
- 해상 절도, 선용금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형사활동 강화 및 해양 안전저해, 기업형 불법어업 등 고질적 해양부조리 기획 수사 등

### ② 경미범죄 심사제 확대 및 현장 인력운영 내실화

- 영세어민 보호를 위한 「경미범죄 심사제」 확대 운영
- 현업 미시행 경찰서 대상 형사인력 증원 추진,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

### ③ 해양 변사사건 관련 민원신청 간소화, 국가지원정보 제공 제도와

- 사고사실확인원 민원신청 간소화, 자살예방 국가지원정보 및 선원 장제(葬祭)비 지원안내 등을 제도화 하는 「변사사건처리 규칙」 개정

## 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보활동 추진

### ① 국가 해양정책 지원 및 사회적 갈등 완화로 국익증진 뒷받침

-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감 있는 여론과 법·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·제언, 정부 - 현장 간 가교 역할로 국가 해양정책 지원
- 정부정책 불만, 어업분쟁 등 집단민원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국책사업 지연, 주민 마찰 등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최소화

### ② 우수정보관 양성 및 정보활동 준법 지원으로 정보 전문성 강화

- 일선 정보보고서 질적 향상을 위해 유능한 정보관을 전문정보관으로 양성, 정보분석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장기근무 유도
- 민간사찰, 불필요한 정보수집 등 활동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준법지원팀 운영, 합법적 정보활동 정착

## ②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

### ① 해양안보상황 적극적 관리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

- 해상을 통한 귀순·북한피랍 등 대북상황의 처리 및 대북전단 살포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상황 적극 관리

### ② 해양안보 대응역량 강화체계 마련을 통해 보안역량 강화

-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직·인력 확대, 보안업무지침 마련 등 보안업무 체계 개선

## ① 외사분야 제도개선 · 협력 강화로 전문영역 확대

- ① ‘외사경찰 운영규칙’ 제정 등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전문성 제고
  - － 우수 외사요원 선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‘외사경찰 운영규칙’ 제정(상반기)
- ② ‘방위사업청’ 등과 MOU 체결로 대외 네트워크 확대(상반기)
  - － ‘방위사업청’, ‘중소기업벤처부’ 등 해양산업·방위산업기술 등과 외사 방첩 영역확장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
- ③ ‘해양국제범죄 컨퍼런스’ 개최로 국내·외 기관간 정보교류 확대(하반기)
  - － 국내·외 유관기관 간 공조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공유

## ② 국민생명 · 안전, 국익을 위협하는 국제범죄 차단

- ① ‘외국인 동향조사권’ 활용, 외국인 관련 超국가 범죄 대응(연중)
  - － 해수산 종사 외국인 대상 범죄정보 수집·관리로 체류 외국인에 의한 밀수·밀입국, 마약거래 등 국제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
  - － 외국인동향조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교육 실시
- ② 지방청－中해경분국 간 MOU 체결로 범죄정보 공유 · 공조강화
  - － 각 지방청과 해당 中해경분국간의 1:1 매칭, 협력기반 마련

## ③ 수사권 조정에 발맞춘 외국어선 사법처리 관계 법령 개정

- ① 「경제수역어업주권법」 개정으로 주도적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행
  - － 형사소송법(’21.1.1.시행)개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, 검사의 수사지휘관련 조문 개정 필요
- ②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훈령 개정, 현장부서에 명확한 처리기준 제공
  - － 법 개정에 맞춰 ‘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절차(훈령 제139호)’ 개정(지휘규정 삭제)

## ① 국제협력 선진화를 통한 해양경찰 대외역량 확대

### ① 국제협력 관계 고도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

-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·일·러 등 한반도 주변국과는 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민감해역 주변국가(나이지리아, 말레이시아)와는 거점형 협력라인 구축
- 국내에서 개최 추진하는 NPCGF('22년), HACGAM('23년, 최초) 체계적 준비

### ② 신남방국 및 개발도상국 ODA 교류협력 확대

- 퇴역함정 양여대상국 선정, 함정수리 판단·정비 등 대상국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양여 프로세스 구축

### ③ 국내중소기업-외국CG 수출상담회 내실화

- 수출경쟁력을 갖춘 해양치안분야 중소기업 및 KOTRA와 무역사절단 구성, 외국해양경찰 현지방문 수출상담 추진

## ② 국제법·국제정보 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 해외파견 확대

### ① 글로벌 해양경찰로서 국제법·국제정보 역량 강화

- 주변국 간 해양분쟁 발생 대비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법위원회 등 국내전문가와 실질적 협력 추진
- 전문가 초빙 맞춤형 특강으로 국제법 소양 강화 및 우리청 인력 해외 국제해양법 전문교육 참여 추진으로 내부전문가 양성

### ② 국제기구 국제전문가 파견 직위 확대

- 국제정보 수집·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파견\*을 확대하고,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전문관 운영·관리 등 체계화

\* UNODC(유엔마약범죄사무소), RECAAP ISC(아시아해적퇴치협정 해적정보센터) 등



## ① 방제조직·인력 체계 고도화

### ① 현장 대응에 최적화된 조직·인력 운용체계 개선

- 5개 경찰서(여수·부산·울산·인천·평택) 현업부서 신설 및 방제 합정 필수 운항요원 지정으로 해양오염사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
- 해양환경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및 해양환경 최신키텐 등을 활용하여, 방제분야 민간협력 업무 통합 수행

### ② 해상화학사고 대응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

-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 파견할 방제 전문인력 확보
- 국립공원공단과 MOU 체결, 재난관리 취약분야(예방, 복구단계) 개선

## ② 「2050 탄소중립」 정책 기반 방제자원 확충

### ① 미래 방제수요 감안 방제자원 확충 로드맵 수립 및 신기술 개발

- 탈탄소 가속화, 선박연료(LNG·수소 등) 대체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방제기술 분석 및 자원 재배치 등 ‘방제자원 중·장기 확보계획’ 수립
- 저유황유 방제기술·장비 개발 및 친환경 LNG 방제정 건조(3척)

### ② 방제비축기지를 다기능화 하여 “광역방제지원센터” 로 개편

- 교육·훈련 기능 강화 추진 및 제주광역방제지원센터 신축(‘20~’23년/ 21억)

## ③ 국내·외 전문가 협업을 통한 국제환경 이슈 대응

### ① 친환경연료 선박 사고 방제 전문가 그룹 재설계 및 국제협력 선도

- 주변국(한·중·일·러)간 방제협력 중·장기 전략 수립 및 NPCGF 위기대응그룹 의장국으로 LNG추진선 사고대응 관련과제 주도

### ②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을 통한 新 남방 정부정책 뒷받침

- <1차 사업>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세부과제 추진(~’22년)
- <2차 사업> 착수를 위한 현지 공동기획조사(해경-KOICA) 실시(’23~’25년)

## ① 민·관·공공 협력기반의 통합방제체제 마련

### ① 민간방제 활성화 및 해안방제 역할 강화를 위한 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

- 해경청 지휘에 따라 민간방제세력 긴급동원, 방제훈련 경비지급 및 사전조사를 위한 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
- 해안방제책임기관(지자체, 해수청, 항만공사 등)의 평시 해안오염 사고 대비와 해경청의 지원을 위한 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

### ②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제도 및 기준요율 마련

- 민간방제세력(유류이적·파공봉쇄·비상예인 등)에 대하여 유형별 대응능력을 관리·활용하기 위해 사전조사제도 운영(법 개정 후속조치)
- 국가에서 오염사고, 방제훈련 등 민간방제세력을 동원한 경우, 비용지급을 위한 기준요율 마련(공단 용역 → 해경 고시)

## ② 방제훈련·교육 고도화 및 과학적 시스템 운영

### ① 배출방지조치훈련 도입 및 VR교육 콘텐츠 개발

- 민간방제세력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배출방지조치(파공봉쇄·기름이적·비상예인 등) 훈련 신규도입 및 시범운영 실시
- 해경방제요원 및 방제의무자(선박·시설)의 역량 향상을 위한 상황별 VR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(해경·공단·해양수산연수원)

### ② 통계 기반 위험예보제 실시 및 R&D 성과물 현장 적용

- 시기별 해양환경 위해사고, 해역별 위험요인 등 분석·평가 및 위험예보 발령기준 명확화를 통해 맞춤형 위험예보 시행(정기·수시)
- 방제대응지원시스템 R&D 성과물에 대해 실제사고 적용·평가 및 AI 기반 해양오염 탐색·평가 기술 신규R&D 추진

## ① 선박·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 강화

### ① 선박·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 강화

- '21년 국내선박 황합유량 규제강화 시행(3.5%→0.5%)에 따라 선박 연료유 및 대기오염방지설비 적합여부 중점 점검
- 국내선박 황합유량 기준 및 배출규제해역 규제 강화 지속 홍보

### ② 휴대용 분석장비 확보

- 휴대용 황분석기 추가 배치로 현장점검 적시성 확보(분석기간 5일→10분)
- \* '20년 3대(부산, 울산, 인천)→'21년 5대(여수, 평택, 창원, 목포, 포항)→'22년 11대

## ② 고위험 선박·시설 집중 관리 및 국민참여 예방활동 강화

### ① 원유부이 등 고위험 선박·시설 관리강화로 재난적 오염사고 예방

- '20년 울산 원유부이 사고와 같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부처합동 점검
- 노후 소형유조선 등 고위험 대상 점검을 확대하고 어선 등 소형 선박은 컨설팅과 제도 위주 전환

### ② 맞춤형 해양오염 예방활동 실시

- 위험도 분석을 통해 기상 악화 시 해상공사 동원선박 점검, 동절기 카페리 합동점검 등 대상·지역·시기별 테마점검 시행
- 오염사고 발생 시 유지문 감식 자동화프로그램을 활용, 신속한 행위자 조사 지원 및 분석 신뢰도 향상

### ③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 및 해양오염예방 국민참여 공모전 개최

-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불법배출 단속, 해양종사자 교육 및 민·관 합동 수중·연안 정화활동 지속 실시
- 기름오염, 해양쓰레기 등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모전 개최

## ① 필수·유망 과제에 선제적 재정 지원 및 미래 정책먹거리 발굴

- ① 「정책 스타트업 시드머니(Start-up Seed Money)」를 통한 역점사업 적극 지원
  - 연두업무 역점과제와 신규사업에 대해 ‘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재정 (스타트업 시드머니) 투자’를 통해 새로운 정책시도와 新 성장동력 뒷받침
  - ‘예산집행심의회’를 통해 방향성·시급성·실현가능성 등 종합 고려, 「스타트업 시드머니(Start-up Seed Money) 과제」 선정·지원
- ② 내·외부 자문 인력풀 활용, 「미래정책 Pool」 구성
  - 필요 시 전담반 구성, 「정책 Pool」 발굴·추진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 수행

## ② 주요 정책에 대한 과정별 관리를 통해 성과창출 주력

- ① 업무계획 수립-실행-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관리체계 마련
  - 장기플랜인 「미래 발전전략(비전 2030)」의 핵심 내용들이 매년 「주요 업무계획(현안-미래과제)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상호 연동 및 이행력 강화
  - 주요업무·성과관리 과제, 지시사항 등 역점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‘업무협의체’(현안실무회의-정책조정회의)를 통한 과정점검 강화
- ② 선제적 국회 활동으로 정책성과 뒷받침
  - 시기별 국회 지원이 필요한 테마를 선정, 최적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및 핵심정책·예산 등 적극 반영 추진

## ③ 현장 중심 조직을 위한 필수 예산·기금 확보

- ① 「최고의 바다 전문가」 육성을 위한 촘촘한 현장예산 확충
  - ‘적지만 임무와 사기증진에 꼭 필요한’ 필수예산 확충(‘21년 962억)으로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주력
- ② 「2조 예산 시대」를 대비한 전략적 예산확보 체계 마련
  - 주요 핵심사업 중심 적극적 예산확보로 매년 10% 이상 증액 추진, ‘22년 1조 7,000억 원을 거쳐 3년 후 2조 원 시대 개막 준비

## ① 법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독자적인 정책추진 기틀 공고화

### ① 타 부처 소관법률 공동소관 및 적기 개정 추진

- 타 부처 소관 법령 中 해경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연관성이 높은 법령에 대한 공동소관 및 입법권한 확보

### ② 법률 제·개정全过程에 대한 대응 체계화

- 「법안심사 대응 T/F」 운영을 통해 역점 추진 법안 제·개정 관련 국회 회기별 발의부터 통과까지 체계적 과정 관리 시행

## ② 정책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운영방식 혁신

### ① 「해양경찰力」 마련 등 환경변화에 최적화된 조직 운영 기틀 확립

- 정부조직 개편에 대비, 조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·장비 배치 기준인 「해양경찰력」 마련(연구용역 활용, 수용성 담보)
- '20년 미반영 분야 및 현장인력 보강 등에 관해 소요정원 확보 지속 추진

### ② 「정책일몰제」 고도화 및 협업 활성화 등 국민 중심 조직으로 리빌딩

- 「정책일몰제」를 통해 정책 유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, 정책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, 대국민 정책 효용성 극대화 도모
- ‘해양안전’, ‘국민편의’를 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반영, 해수부 민간단체 등 업무 유관단체와 연계한 민관 협업과제 발굴·시행

## ③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민체감 성과 창출

### ①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효율중심 조직문화 정착

-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「변화관리 기본계획」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업무 효율화 및 조직관리(리더십, 동기부여 등) 개선 추진

### ② 「통합 직무만족도 조사」 도입으로 자발적인 업무몰입 환경 조성

- 기능별 만족도 조사를 통합한 직무만족도 조사를 도입, 내부정책 만족도 측정 및 취약점 발굴·개선을 통한 정책 수용도와 생산성 제고

혁신	19.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관리	인 사
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## 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고도화 추진

- ① 「직무능력표준(KCGCS)」 단계별 확대 및 재직경찰관 직무그룹 재설계
  - － 사무실 및 현장 주요직위 대상, 매뉴얼을 활용하여 직위별 책임·역할·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직무능력표준(KCGCS) 개발
  - － 신입경찰 ‘육상직별’ 도입과 함께 재직경찰관의 기능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·부서·인력현황 등 감안, 직무그룹 재설계 추진
- ② 젊고 유능한 인재의 본청 근무 유인을 위한 인사 환경 개선
  - － 개인적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변화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한 경감·경위급 직원들의 본청근무 기피 심화
  - － 심사승진 TO 확대, 본청 경력가점 신설 등 승진관련 인센티브 확대 및 특별승급·전문직위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등 유인책 마련

## ② 조직원들이 만족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정착

- ① 「인사운영시스템」 활성화 및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정례화
  - － 기존 수기(手記)로 작성하던 모든 인사운영 관련 사항을 시스템化 하여 대상자에게 공개, 인사 효율성·투명성 제고 및 불만요인 저감
  - － 주기적인 「인사 만족도 설문조사」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발전적 개선의견을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
- ② 전보제도 개선, 소속기관 권한 강화로 인사만족도 제고
  - － 사무실 장기 근무자는 ‘현장부서 우선보직’, 현장 부서는 ‘선호－비선호 순환근무’ 등 형평성을 고려한 전보제도 개선
  - － 특별승진·승급, 6급 승진심사, 경위 승진임용 등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소속기관에 단계적 위임, 책임행정 강화



혁신	20. 지속적인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	교육훈련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## ① 해양경찰 독자적 교육훈련 법령 및 시스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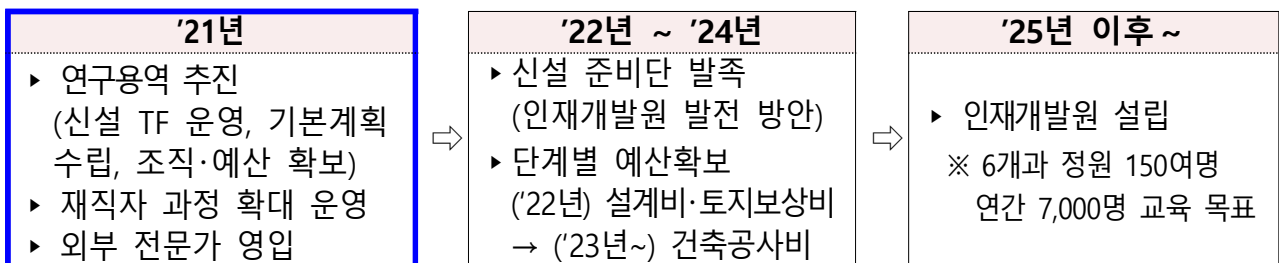
###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(대령) 제정

- 현재 경찰청 소관 교육훈련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, 해양경찰 독자적 교육훈련체계 및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령(대령) 제정 추진(~4월)
- 교육훈련규정(대령) 제정과 연계, 소관 행정규칙 제·개정 추진(~5월)

### ② 해양경찰 특화 「교육훈련통합시스템」 구축

- 우리청 독자적 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예산 확보(6억)

## ②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기반 마련 등 재직자 교육 강화



### ① 「(가칭)해양경찰 인재개발원」 설립 연구용역 추진

- 「인재개발원 신설 TF」 구성(~2월),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 필요성/ 조직·인력 규모, 예산/ 부대시설 소요 등 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(~3월)
- 첨단 기술(VR/AR) 기반 복합훈련센터\* 구축 예산 확보('22년~'26년, 300억)

### ② 재직자 대상 교육(기본·전문 등)과정 확대 개편

- <기본> 선수학습으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기간 확대(1주)
- <전문> 상황관리 수요증가와 경감근속 단축에 따른 보직교육 등 10개 과정 500명 확대 운영 및 학점은행제와 연계 학위 부여로 인센티브 제공
- <위탁> 해양수산연수원, 해군 등과 협력, 위탁 과정 확대 운영(5개→15개)

### ③ 교수요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영입 추진

- 인사처 주관 신규 사업에 적극 대응, 상황관리·수색구조·항해 및 기관 분야 등 특화된 분야에 퇴직자를 활용하여 교수요원 확보(18명)
- 국제법·형사법·선박구조 등 전문 분야 임기제 채용(3명) 추진



## ① 첨단 과학기술을 해양경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

### ① R&D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

- 벤처형조직 종료 이후('21.7월), R&D를 총괄·관리하는 추진체계 개편

### ② 연구개발사업 체계 고도화로 '과학기술 중심 新 성장동력' 확보

- R&D 사업진행 주기(수요-기획-관리-성과활용) 단계별 추진사항, 기능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R&D 수행체계 정립
- R&D 종료 시 사업(과제)담당관 주관 성과물\*의 현장 시범운용·평가 후 예산사업 구매, 추가 실용화 R&D사업 여부 판단

\* 「20년 종료과제」 : 나노구조체, 유지문 감식, 선내 수색구조, 수중표류 등 7개

### ③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

- 광역해양정보 상황인식체계 위성, 수색구조 의사결정, AR/VR교육·훈련, IoT·웨어러블디바이스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
- 수중수색로봇(AUV), 중형급 무인기 등 첨단장비의 차질 없는 개발을 위해 계속사업 연차소요액 395억 원('21년 대비 51% 증액) 확보

## ② 현장 문제 해결형 임무장비 개발

### 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개발 및 시범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상용화

- 현장 서포터즈 대상 워크숍 개최, 아이디어 공모 등 Bottom-Up식 개발 과제 발굴 및 전문가(본청담당자, 변리사 등) 컨설팅 활성화

### ② 오션랩 사업 및 3D프린팅 기술 저변 확대

- 오션랩 사업 관련 이행력 지속 확보를 위한 「오션랩 사업 운영 규칙(훈령)」 제정 및 가이드라인(성과집) 제작
- 임무장비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,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3D프린팅 民·官 기술 교류 및 맞춤형 교육 지원 추진

## ① 생활 밀착형 『新 홍보 플랫폼 전략』 추진

### ① 국민 참여 활성화와 연계한 홍보활동 주력

- ‘어린이 독후감 경진대회(제2회)’ 등 참여형 홍보 행사 추진
- 갯벌 안전 등 어린이 교육콘텐츠 개발, 「어린이 직업 체험관」 활성화
- ‘해양경찰 캐릭터’, ‘아기 해양동물 캐릭터 및 이모티콘’ 개발·활용
- ‘해양안전(환경) 동화책’ 제작 및 ‘오디오북’ 전국 교육기관 보급

### ② 주요 방송매체 및 공익광고를 활용한 기획홍보 확대

- 국민적 관심 및 접근도가 높은 예능 프로그램 편성 및 영화 제작\*  
중점 추진, “가벼운 웃음 속에 중요한 해경 역할 인식의 場” 제공

\* tvN “유 퀴즈 온 더 블록”, MBC “바다경찰 시즌3”, 해양경찰 주제 영화 등

## ② 위기 상황에 빛나는 신속 정확한 언론대응 역량 강화

### ① 소속기관 언론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위기소통 훈련 추진

- 지난 2년간(18~19년)의 도상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, 훈련 주제 다양화 등 언론 위기대응 시스템 정착 및 고도화

\* '18년 19개 (해양경찰서), '19년 25개 (해양경찰서 + 지방청·교육원)

- 위기소통 훈련 시, 소관 부서장(과장) 역할 강화하고, 지방청 주관 불시상황 훈련과 통합하여 언론 소통을 훈련 실시하여 내실화

### ② 『(비대면) 위기소통 사이버 강의』 개설

- 언론 위기소통 사이버 강의 개설, 홍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
- 언론홍보, 기획홍보, 오보대응, 위기관리 언론소통 분야로 세분화하고 연중 누구나 수강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·운영

## ① 상시 예방감사 체계 구축을 통한 주요정책 이행력 강화

### ① 직무수행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업무수행 유도

- 조직원 스스로 의무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, 감사기능은 주요 정책 사업 Risk관리에 집중하는 상시 자가진단 「바로·해 플랫폼」 구축
- 각종 규정(법령·행정규칙·매뉴얼 등), 내·외부 감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업무분야별 적법성·타당성을 점검·개선하는 진단리스트 개발·배포

### ② 사전컨설팅 감사·테마형 기동감사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지원

- 시급한 사안에 대한 컨설팅 신청 시 절차 간소화(서→본청)·회신기간 단축(30일→5일 이내)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및 적극행정 지원
- 문제해결 중심의 테마형 기동감사 추진으로 현장부서의 구조적 취약분야 등 주요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분야 집중 발굴·개선

## ② 청렴도·반부패 우수기관 안착으로 국민 신뢰 초석 확보

### ① 기능별 책임관리제 시행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안착

- 지휘관이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 ('19년 관서장 → '20년 지휘관)
- 직원모두가 함께하는 '참여로 하나 되는 청렴문화' 실천
- 접촉기능,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기능별 고객만족 책임제 실시

### ② 반부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부 부패방지 평가 우수기관 도약

- 해경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부패방지 시책 발굴의 협업 강화
- 레고LEGO형 반부패 협의체 운영으로 시책의 완벽한 이행

### ③ 고비난성 4대 비위 감소 활동 및 자체 예방 노력

- 시기·테마별 예방감찰을 통한 고비난성 4대 비위 예방 주력

## ① 시대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복무기반 조성 및 소통 증진

### ①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부합하는 ‘언택트 복무관리’ 기반 구축

- With-Corona시대에 다양한 여건과 우리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무 규정, 방역매뉴얼 제·개정으로 업무 효율성 및 일선 수용도 제고

### ② 특수기록관 건립 전담 T/F 구성, 기본설계 및 공사 예산확보 추진

- 전담 T/F(경감1, 경위이하2) 구성 및 기본설계공모(3.4억) 조달 발주 추진

### ③ 근무환경 개선 및 건전한 조직 만들기

- '20년 설립된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등 민주적 조직 발전 견인
-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정부 정책 기조(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등)에 부응하는 양성평등 정책·제도를 지속 발굴 추진

## ②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직원 생활 지원 등 복지개선

### ① 산림치유 서해권(나주) 추가 지정으로 원거리 직원 참여율 향상노력

- 산림치유 서해권역(나주) 추가지정으로 전 직원 참여율 제고 및 확보
- 서해권 퇴직지원센터 확대(2.9억) 및 퇴직지원 프로그램 확대

### ② 경제적 어려운(질병, 재난 등) 동료직원 지원으로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

- 상부상조회 회칙을 개정 및 외부포상금 자발적 기부유도
- 사회가치투자 기업 등 기부금 참여 추진(사회복지 재단 경우)

### ③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피로감 감소를 위해 식단 및 편의시설 개선

- 식단 메뉴 다양화 운영 및 식당 환경·분위기 개선, 청결유지(시설보수)